

종이 교과서가 사라진다

교육의창

노영필
교육평론가

‘AIDT’를 아시나요? AIDT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약자이다.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된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발맞춰 교육의 지각변동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5년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는 초·중·고에서 전면화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장 내년 2025년에는 초등에서 국어, 수학, 영어, 정보, 중학교에서는 수학, 영어1, 정보,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수학, 공통영어1·2, 정보 교과를 필두로 2028년에는 초중고 모든 과목에 적용하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하이터치(High Touch), 하이테크(High Tech)라는 개념으로 AI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하이터치란 교사가 학생참여형 수업을 통해 고차원적 학습을 지원하고 인간적 연결을 통해 학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길러준다는 것이고 하이테크란 학생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두 축의 교육방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학생 모두를 위한 맞춤형

초교육이라는 비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 교사는 학생별 학습경로와 지식수준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AI보조교사의 활동 분석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의 성취에 맞는 개별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데이터 자료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기록한다. 학생은 학생이해도에 맞는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내재적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더 많은 학생이 학습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이해받는 ‘나’로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추진취지를 밝히고 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제시되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무조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에서만 홍보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정책의 인질이 된다. 반대 분위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현장은 극도로 고달프다. 여기에 떠오르는 염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려졌다지만 요즘 세대답게 디지털 영상의 지나친 의존도, 글을 읽지 않아 갈수록 떨어지는 문해력,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 학습 손실이 AI에 의해 한방에 치유될 수 있을까? AI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교사의 사후관리가 없는 학습력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이 사라지고 기계와 디지털이 인간의 감성과 정서를

대체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기술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는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인터넷이 끊긴다면 모든 수업 활동이 중단된다. 지금도 전자질판과 컴퓨터가 연결되지 못하면 수업을 못한다. 거기다 악성소프트웨어의 공격이라도 받으면 모든 교육시스템은 블루스크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은 에너지 대란을 불러올 것이다. 초중고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될 것이다. 갈수록 에너지문제로 지구는 홍역을 앓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교실 에어컨과 각종 기기 운영에 대한 전력소모는 예산 부족으로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인간미가 실종된 학교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 것이다. 디지털 AI는 친하고, 사람 친구는 멀어질 수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2000년대 초 낮과 밤이 바뀌어 학교생활을 못하던 학생들의 기억이 뚜렷하다. 아무리 챗봇으로 자극한다고 해도 인간의 의지를 조절할 수 있을까?

개발 중인데도 ‘실물’자료도 없이 현장교사들에게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약으로 개발 중인 약을 시판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닌데 희망의 애드벌룬만 높이 띄운 셈이다. 현장 교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AIDT, 누구를 위한 사업 추진일까? 몹시 궁금해진다.

社說

싸늘한 국민의 목소리 겹쳐히 반성해야

윤 대통령 오늘 한 대표와 만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달 24일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날마다 바닥으로 추락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국정 쇄신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면담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은 김 여사 관련 내용과 의정갈등 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김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을 정리하는 등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과 규명 절차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 마련과 수평적 당·정 관계와 당·정 소통 정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야당의 말처럼 칼바람보다 더 싸늘하다. 당장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턱걸이하며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떨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일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인사, 인허가, 이권, 당무 개입, 국정 개입까지 셀 수 없는 의혹 가운데 여지없이 여사님의 흔적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을 겁박하는 명태군씨의 행보도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

국민의 신뢰 없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21일 만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민생에 대한 해결책도 내놔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침몰하는 난파선이고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겹쳐히 듣고 반성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지 모른다.

반드시 지켜야 할 GGM 상생 일자리정신

사회적 대타협 원칙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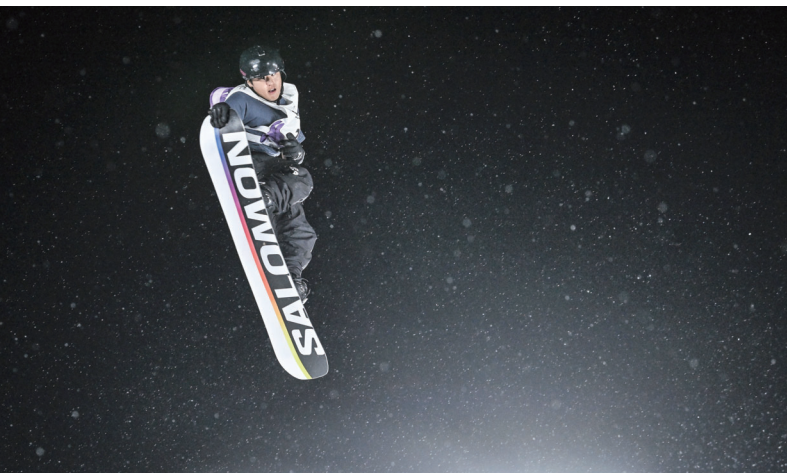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가 파업을 취소하고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나선다. GGM 노사 등은 지난 17일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주관 4차 조정 회의에서 노조와 사측은 지노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교섭 장소를 사내 상생관·사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교차해 열기로 했다. 주 1회 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교섭이 필요하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고안에 따라 노사는 주중부터 임금·단체협약 등에 나선다. 앞서 GGM 지회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202명 중 190명이 찬성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주관 조정 회의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의 파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GGM은 2019년 설립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물이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설립된 만큼 노사의 성실한 협력은 창업정신이나 다름없

다. GGM은 현재 누적 14만 4000여 대를 생산하고 있다. 고용인원은 690명으로 지역주민이 약 96%이고, 20·30대 청년은 82% 이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GGM은 올해 캐스퍼 전기차 생산과 해외 수출이라는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어 내년까지 2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도 내놨다.

이 같은 성과에도 노조 결성과 파업 위험까지 치닫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광주시, 현대차 등 대주주 등과 사측의 미흡한 점도 아쉽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는 사측 등이 약속한 주거개선 등의 사회적 임금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역시 광주형 일자리 태동에 참여했음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부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각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원칙과 정신이 반드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GGM노사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노력이 없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실패한 일자리’라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동현이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쿠르에서 열린 2024-25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빅에어 결선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동현은 총점 108.00으로 7위를 기록했다.

AP/뉴시스

서석대

올해 여순사건 추념식은 유독 의미가 깊었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여순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추념식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며, 그동안 외면받았던 역사적 아픔을 국가적 화두로 다시 꺼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순사건은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낸 역사적 비극이었다. 당시 좌우 이념 대립과 정부의 강경 집압은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자로 만들었으며,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긴 세월이 흘렀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는 오랜 시간 지속됐지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부족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념식은 그동안 국가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외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과 새로운 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추념식은 여순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잡고 치유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추념식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지역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졌던 여순



사건의 무게가 이제 국가적 책임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신호다. 정부와 국가가 그동안 외면했던 역사를 직면하고, 이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추념식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의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여순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추념식의 위상이 오르고 있는 만큼 이 비극적인 사건이 국가적으로 재평가되고, 역사의 올바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념과 지역을 초월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송민섭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